

산자부, 미래차 전환·수출 지원대책 발표

# 車 부품산업 14.3兆 투입... 12종 융복합소재 2兆 R&D 추진

자금지원 등 3개 핵심과제 추진  
2030년까지 3만명 인재 양성  
미래차 생태계 신속 전환 촉진

최근 자동차 수출 호조세를 미래차 산업 전환으로 이어가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자동차 부품산업에 14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고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자동차부품 산업 전략 원탁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완성차업체 현장방문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내 자동차 생태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14.3조 자금 지원 및 일감 확보 ▲미래차 부품 핵심 기술·전문인력 양성 ▲5대 주력·유력 시장 수출 지원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 부품업계에 정책금융 8.9조원... 2500억원 규모 저리대출  
먼저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와 미래



이창양(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에 앞서 완성차사 상생협력 선언식에서 내외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14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내연기관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2%포인트까지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저리 대출 상품을 올해 약 25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과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협력사의 원가·임금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 신용대출이 어려운 2·3차 협력사를 위한 대출 보증, 공동투자 연구개발기금 조성 등을 추진한다.

부품업계에 미래차 분야 새로운 일감 공급도 추진한다. 2027년 상반기까지 친환경 미래차 누적 200만대 국내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개별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했고, 수소차 공급 확대에 맞춰 수소트럭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올해 1조9000억원이 편성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물량

을 작년 대비 29% 확대하는 등 올해 전기차 27만대 신규 보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을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전기차 충전기도 2022년 19만기에서 2030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한다.

◆기업 투자 지원 강화

전기차 공급과 부품수요 확대를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국가 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상향하고, 미래차 생산설비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계해택에 힘입어 현대차그룹은 화성, 광명, 울산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는 등 29년 만에 완성차 국내 공장 투자를 시작했고, 이는 우리 부품기업들에게 충분한 일거리 공급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완성차사가 발표한 2026년까지 95조원 + α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부 내에 '자동차 투자애로 해소 전담관'을 지정해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는 한편, 올해 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도 마련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 시스템 등 6대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희토류 저감모터 등 12종의 융복합 소재 개발 지원 등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도 투입한다. 또 2030년까지 미래차 분야 인력수요 전망치의 약 86%에 해당하는 3만명의 미래차 핵심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자동차와 부품 수출의 2대 주력시장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인도 등 3대 유망시장 진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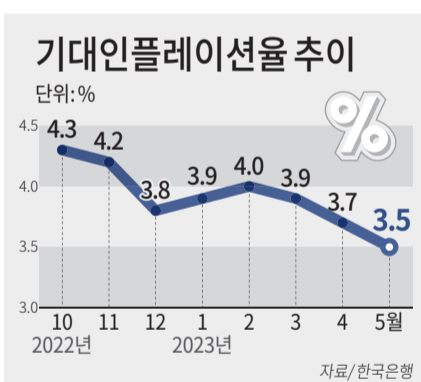
## 기대인플레이션율 3.5%... 3개월 연속 하락

한은 5월 소비자동향조사  
공공요금 인상 소식에 0.2%p 소폭 하락  
소비자심리지수 98... 전월비 2.9%p ↑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을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이달 3.5%를 기록하면서 3개월째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5%로 전달(3.7%)보다 0.2%포인트(p) 떨어졌다. 지난 3월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3개월째다.

황희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물가지수가 (4월 기준) 3.7%까지 내려온 것이 큰 것 같다"며 "다만, 5월초부터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는 뉴스에 따라 소폭하락에 그친 것 같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앞으로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의 방향과 관련해,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둔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할 수 없고, 국제유가 흐름의 변수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며 "공공요금이 5월부터 인상한다고 하지만 인상분이 모두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상폭이나 시기에 대한 불확실

성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1년 동안 물가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품목으로는 공공요금을 꼽은 응답이 76.1%로 가장 많았고, 농축수산물(30.4%), 석유류제품(28.5%)이 뒤를 이었다. 전월에 비해서는 공업제품을 선택한 응답이 3.8%p 늘었고, 석유류제품은 6.8%p, 공공요금 1.5%p 줄었다.

한편 5월 전체 소비자심리지수(CC SI)는 98로 4월(95.1)보다 2.9%p 상승했다. 지난해 5월(102.9)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지수는 이 지수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설정한 뒤 이보다 높으면 경기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낙관적인 것으로, 그 이하면 비관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경제 6단체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스마트일자리본부장,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박양근 정책본부장. /뉴시스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국회 상정 멈춰야"

"법안 통과시 불법행위 더 늘어날 것"

경제계가 과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무너지고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해 바 있다"며 "법 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마저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단체교섭 거부시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청사업주 등이 노조법상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과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사판단까지 정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불법행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 권혁웅 "기술중심 문화로 글로벌 기업 육성"

(한화오션 대표이사)

>> 1면 '한화, 대우조선 인수' 서 계속

특히 실무업무의 주축인 대리 및 과장급과 특수선 설계 인력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 생산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결속력이 강한 강성노조와의 관계 정립도 숙제다. 강성으로 꼽히는 대우조선노조는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를 결정했을 때부터 가장 큰 과제로 주목받았다.

협력업체 종사자를 뺀 대우조선 전체

직원 중 4800여명이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소속 노조원이다. 대우조선 노조는 과거 회사 매각 과정에 노조 참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인수기업의 육포조선소 현장실사를 무산시킨 적이 있다.

권 신임 대표는 임직원들을 향한 CEO 편지를 통해 "오션의 임직원들은 육포만 위에 세계적인 회사를 일궈낸 저력이 있고, 한화에는 수많은 M&A를 통해 역량 있는 기업과의 시너지로 핵

심사업을 이끌어 낸 성장 스토리가 있다"며 "한화오션의 장점인 기술 중심의 우수한 문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기술 기업, 세계 최고의 경쟁력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오션의 '오션'은 '지속가능성'과 '도전'을 의미한다. 미지의 영역이 95%에 달하는 대양을 무대로 우리의 개척정신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글로벌 해양에너지 리더'를 향한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